

대통령 기록물에 나타난 재외한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재외한인의 본국 사회 참여*

구본규**

| 목 차 |

I. 서론	IV. 재외한인들의 본국 사회 참여 과정
II. 선행 연구 검토	V. 결론
III. 동포, 교포, 교민에서 다시 동포로: 재외한인 명칭의 변화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재외한인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나타난 재외한인의 범주와 재외한인들의 본국 참여과정을 검토한다. 먼저 본 연구는 재외한인과 관련한 7개의 명칭을 검색어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의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을 검색하고 이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재외한인들이 호명되는 방식과 그 명칭이 생성, 유포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재외한인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가지는 역사성과 정치성을 논의한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던 재외한인들의 본국 사회 참여 사례와 이에 대한 역대 정부의 대응방식을 고찰함으로써 본국 정부와 재외한인들의 관계가 상호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재외한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재외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을 혼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 연구는 재외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 그 자체가 재외한인의 역사적 경험 및 한국 사회와 재외한인의 관계를 반영하는 구성물임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재외한인들의 본국 참여나 재외한인들을 포섭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최근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통령기록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연구되었음(대통령기록 자유연구과제 과제번호 자20141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구위원.

라 정부 수립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민족”이 다양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집단적 범주임을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재외한인들을 포함하여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을 한국 사회로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재외한인, 재외동포, 초국적 이주민, 탈영토적 민족국가, 대통령기록

I. 서론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을 묻는 한 조사(권일남·김태균 2014)에서 77%의 응답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67%는 일제강점기 때 자의 또는 타의로 중국·구소련·일본으로 이주한 사람 및 그 후손을, 약 59%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를, 그리고 약 49%는 한국어를 모르는 이민 2, 3세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는 입양인 등을 외국에 사는 같은 민족,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조사연구의 특성상 응답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라는 집단이 자연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민족’이나 ‘가족’과 같은 집단의 범주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construct)되듯이 재외동포라는 집단도 어떤 기제를 통해 구성되어야 하는 범주의 하나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범주가 구성된다는 생각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누가 한국 민족국가의 성원인지가 분명한 것만큼 누가 재외동포인지도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사실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재외동포재단이 만들어지고 재외동포법¹⁾이 제정되기 전에는 해외교포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

1) 재외동포법(2조)과 그 시행령(3조)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 살지 않고 ‘해외’에 ‘정착’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어 외국에 있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미의 재외동포보다 더 분명한 구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 해외교포라는 용어는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된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재외교포라는 말이 나왔고 유학, 현지 주재 등 국민들의 외국체류가 증가하면서 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와 일시체류 국민을 합쳐서 교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동포라는 말이 가진 주관성이 배제된 재외한인(Overseas Koreans)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²⁾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까지 재외한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분명하였다.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보다 다른 나라의 국민이라는 의식이 더 컸다. 그리고 재외한인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한국의 이해와 요구가 투영되어 재현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이주한 국가의 국민이면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선택적으로 동원되는 ‘민족’이 되어 남북대결의 정치역학에서 체제지원세력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외교와 통상에 필요한 로비스트나 중개인으로 개념화되었다.

재외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새롭게 나타난 이민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발달된 교통·정보통신기술의 대중화로 국경을 넘나드는 삶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주는 이제 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정착하기 위한 영구이동이 아니라 개인 생애주기의 일정 단계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간의 체류와 연속적인 귀환으로 개념화되는 것이 더 적절해졌다. 이런 이주현실의 변화 속에서, 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붕괴되자 한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 중국과 구소련 거주 재외한인들의 단기 이주노동을 위한 대규모 민족귀환이주(ethnic return migration)가 발생한다.

이들은 이전 이민자들과 같이 가족단위로 이주해서 이주국에서 자본을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인 “외국국적동포”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재외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축적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자녀를 본국에 두고 와서 이주 노동을 하며 송금을 통해 본국에서 자본을 축적한다. 한편, 이들은 송금 외에도 선물 보내기, 본국에 있는 가족·친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빈번한 왕래를 통해 한국에 있으면서도 본국의 사회 관계에 동시에 개입하게 된다.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머물 때 한 ‘핏줄’을 지닌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명백히 구분될 수 있었던 이들은 이제 ‘동포’와 이주민의 경계에 위치한 사람들이 되었다. 또 이들은 이주국의 국적과 재외한인이라는 역사적·문화적 소속, 즉 성원권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살면서 동시에 본국에도 개입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범주의 집단이 되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재외한인 집단의 등장은 국가와 민족 사이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국가는 “한 주어진 영역 내의 인구집단을 조직하는 정책, 실천, 관료적 구조”를, 민족은 “국가에 의해 포괄되는 개인들 사이에 집단성과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Basch 2001, 119)로, 민족국가 건설은 “국가와 연결된 다양한 인구 집단을 연결하고 국가의 제도, 관행,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실천”(Basch et al. 1994; Basch 2001, 119 재인용)으로 정의한다. 새로운 범주의 성원이 등장하면 국가는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배제하거나 그 구조와 기능 일부를 변화시켜 새로운 구성원을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배제와 포섭의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흔하다.

재외한인을 선택적으로 한국의 영토 안으로 끌어들여 국민을 만들던 전략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정도로 국경을 넘는 이동이 일반화되고 이동의 규모가 증가하고 재외한인의 존재가 주는 정치경제적 이점이 커지면서 이제는 이들을 ‘국민’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민족국가의 성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작동하게 된다.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deterritorialised nation-state building)이 그것이다. 민족국가의 경계를 신축적으로 확장하여 국가의 성원권을 더 폭넓게 인정하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복수

국적에 대한 인정이 확대되고 이민자들의 본국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등 이런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법과 재외국민선거의 부활 등도 같은 맥락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족국가의 관점에서, 특별히 여전히 혈통이라는 요소가 국민됨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이 아니면서 같은 ‘민족’인 재외한인은 아직도 어색하고 이질적인 존재이다. 여기에 대량 이입이민의 일상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다민족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재외한인의 범주와 성원권을 규정하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재외한인’이라는 범주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과 재외한인을 둘러싼 담론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의 재외한인들에 대한 재현방식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재외한인의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재외한인들이 한국 민족국가에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를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의 재외한인 관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재외한인들이 호명되는 방식과 그 명칭이 생성, 유포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재외한인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가지는 역사성과 정치성을 논의한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있어 왔던 재외한인들의 본국 사회 참여 사례와 이에 대한 역대 정부의 대응방식을 고찰함으로써 본국 정부와 재외한인들의 관계가 상호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2014년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대통령기록관 소장 자료의 수집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³⁾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내용 분석과 담론 분석이다. 분석의 텍스트는 대통령 기록관에 소장된 “종이문서”와 “기록콘텐츠” 중 한국 사회에서 재외한인을 지칭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교민”, “교포”, “동포”, “이민”, “재외국민”, “한인”, “조선족”, “고려인”을 검색어로 검색하여 얻은 자

3) 본 연구는 대통령 기록물의 정리시간을 감안하여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의 기록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료들 가운데 관련성이 낮은 자료와 중복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이다.⁴⁾

재외한인에 대한 인식과 담론에 대한 본 연구가 대통령 기록물에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역대 대통령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은 재외한인들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수립, 집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 재외한인들에 대한 특정한 인식과 담론을 형성하고 유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들이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이 재외한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외한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재외한인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으며 그런 이야기들의 의도와 효과와 영향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태적 분석이 줄 수 없는 역동성을 드러내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기록물들은 공식적 자료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행사와 연설의 기록들이 많지만 오히려 그것이 의례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자료로서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재외한인 관련 대통령 기록물들은 따라서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추상적인 과정을 역대대통령과 정부의 담론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그간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김봉섭 2008; 윤인진 2010 참조). 1950년대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60년대 재일동포의 모국투자 및 복송에 대한 연구와 70

4) 대통령기록관의 여러 형태의 기록물 중 종이문서와 기록콘텐츠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첫째, “전자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선물” 등 그 밖의 자료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또 종이문서 및 기록콘텐츠와 중복되는 자료들이 많아서이고 둘째, 수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웹기록물”은 주로 보도자료, 공지사항,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 등이었는데 이 기록들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적이거나 연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년대 이주사 연구시기를 거쳐 80년대 연구의 주제와 지역이 다양화하면서 본격적인 재외동포연구가 시작되었다. 90년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다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침체를 맞기 전까지 재외한인연구는 재외동포법의 시행과 함께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었다(이진영 2010, 21-25).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만 한정해도, 정부의 재외한인정책(윤인진 2012; 곽재석 2011; 이숙자 2009; 이종훈 2008; 최무현 2008; 전득주 1999 등), 재외한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권일남·김태균 2014; 강일규 2001 등), 재외한인의 성원권(이정은 2012; 정진성 2012; 이철우 2006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가장 기본적인 논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한인들을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늘 혼란스럽다”(전형권 2008, 169).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일컫기 위해 재외와 해외라는 접두사에 교포와 교민 또는 동포와 한인이 조합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은 정책에서의 혼선도 초래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고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재외동포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논쟁적이고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이진영 2010, 27).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에서도 재외동포는 “국적 종류 또는 국적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장기체류하는 자”(한명숙,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나 “재외국민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자”(권영길, 재외동포기본법안)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윤인진 2010, 9). 또 통상적, 법률적, 학술이론적(이진영 2010, 3-4) 용례에 따라 다르게 명명되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용어와 그 정의는 호명하고 규정하는 측의 “문제의식과 목적의식이 투영”(전형권 2008, 169)되어 있으며 재외한인의 이주지역과 이주시기에 따라, 또 본국과 이주국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복합적으로 규정되는 역사적,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재외한인들이 한국 사회의 시기적 분류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집단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는 재외한인들을 20세기 초 “하와이이민과 멕시코이민의 역경[과]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일제의 강제징용·동원의 수난”을 겪은 사람들,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이후 해외로 건너가 “한민족 해외진출의 선구자”가 되었던 “전쟁고아·국제결혼여성·유학생과 해외이주법(1962) 제정 이후 남미·북미 등지로 떠난 해외이민자”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을 위해 단돈 1달러가 절실했던 1960-70년대 독일로 떠난 광부·간호사, 베트남·중동으로 떠난 해외근로자, 수출시장 확대에 젊음을 바친 주재상사원, 1980년대 이후 선진과학기술과 보다 나은 취업환경을 찾아 나선 해외유학생과 신규이민자”(권일남·김태균 2014, 1) 등의 고정된 이미지를 역사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재외한인들을 이런 고정된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은 재외한인들의 인구구성과 경험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재외한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같은 시기에 한국가로 이주한 재외한인이라 하더라도 이주동기의 다양성(박우 2008), 직업(임영언 2006), 종교(Min Pyong Gap 2010), 정착지역(윤인진 2003) 및 성별과 학력(Yang Kyejung & Kim Chigon 2010; 최금해 2010)에 따른 경험의 차이, 다양한 연령층과 이주세대의 차이(Kim Hyojoung & Sun 2010; Choi Yoonsun & Kim You Seung 2010; Chung 2010) 등으로 인해 하나의 동일한 집단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재외한인이 특정 이미지로 재현되어 왔다는 것은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재외한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재현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 즉 재외한인에 대한 이미지는 특정 시기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 정치적 지형, 국제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재외한인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 투사되어 다르게 재현되는 타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재외동포정책 보고서(윤인진 2010, 2-4)는 재외한인에 대한 역대 한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재외한인의 권리와 본국 정부의 의무라는 차원이 아니라 상당부분 북한과의 체제경쟁구도 속에서 결정되었음

을 시사하고 있다. 1955년 일본에서 친북단체로 총련이 성립되자 이승만 정권은 한동안 전체 재일한인의 한국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의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민단계 민족학교인 한국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런 기조는 재외한인의 친북화, 반정부화를 저지하기 위해 재외한인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한 박정희 정부에서도 지속된다. 그런데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재외한인들은 국가가 헌법으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집단이 되었고 올림픽 개최로 경제적 성공을 과시한 노태우 정부에 이르면 재외한인의 범위가 공산권 국가의 동포들에게까지 확대된다.

한편, 재외한인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이 대중적인 타당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에 대한 본국민의 기억이 이민을 떠나기 직전의 상태에 동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런 현상은 국제이주를 국경을 넘는 국가 사이의 단절된 이동으로 보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이민은 전통적으로 한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가는 일회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되었고 이민자들은 한 국가의 국민에서 다른 국가의 국민이 되어야 할 사람들로 인식되었다(구분규 2012 참조).

그러나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이민자들은 이주 후에도 본국과 연결을 지속하고 있었고 본국의 정치와 경제에 다양한 수준에서 개입해 왔다. 바로 초국적 실천을 통해서이다. 흔히 이민자들이 이주국과 본국을 잇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초국적 실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본국 참여는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부터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정치엘리트들의 망명정치나 이민자들의 대중적 정치 참여는 말 그대로 세계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그리스, 한국, 중국, 이탈리아, 헝가리 출신의 이민자들은 민족국가 건설의 과정과 정체성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본국에 영향을 주었고 장개석이나 가리발디 같은 민족지도자들은 여러 나라를 넘나들면서 강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던 민족과 인종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였다”(Levitt & Jaworsky 2007, 133). 또한 이민자들은 송금을 통해 본국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예를 들면,

1900년에서 1906년 사이에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본국으로 보낸 전신환의 총 액수는 놀랍게도 9천만 불에 달한다(Wyman 1993; Levitt & Jaworsky 2007, 133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실제적인 국가 간의 이동은 물리적 거리와 기술적 한계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단절적이고 일회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변화된 이주현실은 이 지역시스템을 공간적으로 확대시키고 시간적으로 단축시켰다. ‘시공간응축(time-space compression)’(Harvey 1989)으로 명명된 이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와 이를 지탱하기 위한 교통통신의 발달에 기반하고 있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겪은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의 재구조화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고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려 하였다. 이들은 “값싼 노동력이 있고 억압적인 정치체제가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보장하는 주변부로 생산설비를 옮기고”(Basch et al. 1994, 25) 이윤실현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정보, 상품,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통신기술을 발전시키며 그 비용을 낮추어 갔다.

자본의 재구조화는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의 노동시장을 변화시켰다. 주변부 국가에서는 늘어난 외국기업의 투자만큼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지역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심부 자본이 설립한 공장에서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더 싼 노동력을 찾는 이들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오래 가지 않았고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실업자로 남게 된 사람들은 국제이주의 잠재적 대상자들이 된다. 그러나 생산시설의 이동으로 제조업 노동인력의 수요가 줄고 서비스, 사무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악화된 중심부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이주민들은 더 낮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이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주변화시켰다.

전 지구적 생산양식은 그러나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거나 가능한 선택지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특정한 기술이나 교육경력, 자격을 보유한 이민자들은 여러 곳에 생산설비를 둔 초국적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여러 국가를 오가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된다.

또 발달된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원거리 통신과 이동이 저렴해지면서 이민자들은 본국과의 연결을 이주 후에도 손쉽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본국과의 연결을 통해 이주국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유연한 전략과 복수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활발한 초국적 실천을 통해 이주민들이 본국과 형성하는 사회관계망이 조밀해지고 확대될수록 이 관계망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적인 영역으로 제도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경으로 나뉘어 있던 두 사회가 두 나라에 걸쳐 있는 하나의 사회로 연결된다. 즉, 이주민들이 형성한 본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사람, 자원, 정보의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이 이동을 제도화하기 위해 두 나라 사이에는 기업, 금융기관, 종교단체, 정당 등 여러 공적, 사적인 조직과 기관들이 형성된다. 이 조직과 기관들을 통해 이주민들,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본국민들은 두 나라를 오고가는 직접적인 초국적 실천을 하지 않고도 계속 두 국가를 연결하는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던 두 국가의 지역, 기관, 조직, 가족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사회, 즉 초국적인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Levitt 2001; Basch 2001). 초국적인 사회적 장에서 이민은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영구히 이주하는 단절적이고 일회적인 이동이 아니라, 교육, 고용, 소비 등과 같이 개인의 생애주기의 특정시기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단기체류와 귀환의 연속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되었다.

재외한인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재미한인들은 영주를 목적으로 이주한 후에도,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도 모국과의 관계와 모국에 남아 있는 친지들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철우 2006, 515)을 보였고 많은 재외한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찾으려 했다(박채순 2004 참조).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가족의 일부만이 이주를 하는 사례들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하게 나타났다(구본규 2002 참조). 특히 90년대 말부터는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지의 한인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찾아 대규

모 단기순환이주를 하고 있다(박광성 2007; 2010 참조).

그런데 초국적인 사회적 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국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Levitt 2001, 5). 예를 들면,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을 이민자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 카리브해의 여러 국가들은 일찍부터 이민자들의 국내 정치 참여를 독려하여 왔는데, 특히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 이주한 자국민들과 그 후손들에게 본국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즉, 이민자들의 초국적 실천을 제도화하고 이들이 초국적인 사회적 장을 통해 본국과 이주국 양쪽에 모두 소속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산을 국가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국가의 시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국 출신의 초국적 이주민들을 자국 정치적 통일체(body politic)의 일부”로 포섭, 동원하기 위해 민족국가를 지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그 경계를 신축적인 것으로 만드는 전략은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deterritorialized nation-state building)’로 개념화된다(Basch 2001). 그리고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이민자들에게 본국의 성원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정치지도자들은 계급, 성별, 세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상징과 재현의 방식을 만들어”(Basch 2001, 119)낸다.

그간 한국에서 논의되고 실현되어 온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 허용문제, 재외국민참정권도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성원권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재외한인에게 실질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2004년 동포의 범주를 확대하면서 조선족과 고려인을 포함하여 재외동포를 더 폭넓게 인정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는 외국국적 불행사를 통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었다. 또 2009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2012년 총선부터 외국 영주권자를 포함, 19세 이상의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이진영 2010).

그런데 한국의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는 두 가지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본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성원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수단 외에도 이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상징과 재현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외한인정책과 성원권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또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재외한인들을 민족으로 포섭하기 위해 어떤 상징과 재현의 방식을 동원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고 있지 않다.

둘째,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기존 논의가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민자들의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국이 해외에 있는 자기들의 복리를 위한 적극적 교민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이철우 2006, 515)했던 재미한인들이나 동포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을 주도한 재중한인들의 경우처럼, 재외한인들은 초국적인 사회적 장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Ⅲ. 동포, 교포, 교민에서 다시 동포로: 재외한인 명칭의 변화

1. 대통령과 재외한인의 명칭

재외한인이 어떤 명칭으로 재현되어 왔는가는 누가 재외한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호명하는 사람들이 재외한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 이는 민족 내에서 재외한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따라서 재외한인이 어떤 성원권을 가지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이 재외한인을 어떻게 범주화했는지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통령들이 어떤 명칭으로 재외한인을 호명했는지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했다.

각 검색어들은 기록물에서 단일하게 사용된 경우보다 복수의 명칭, 예를 들면 동포와 교민이 같이 사용된 사례들이 많았지만 대체로 특정 맥락에서 특정 검색어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민”이라는 단어는 “이민자”의 의미보다는 “미주/하와이 이민 ○○주년 기념사”처럼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이민”이라는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경향은 대통령별로, 즉 시대별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⁵⁾

<표 1> 대통령과 재외한인의 명칭

	교민	교포	동포	이민	재외국민	한인	조선족	고려인	계
이승만	3	16	31(295)	6	3	18(197)	0	0	77
윤보선	0	13	0(2)	0	0	0	0	0	13
박정희	35	162	95(241)	31	21	44	0	0	388
최규하	0	1	4(7)	0	1	0	0	0	6
전두환	51	22	93(112)	7	7	5	0	0	185
노태우	79	20	101(142)	7	1	13	0	0	221
김영삼	81	32	114(139)	5	2	36	7	3	280
김대중	29	17	277(300)	10	6	61	4	2	406
계	278	283	715	66	41	177	11	5	1,576

* 저자 작성

전체적으로 “동포(同胞)”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하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만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에서 재외한인은 “동포”로 가장 많이 호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부터 김영삼 대통령 시기까지 “동포”의 출현횟수는 100건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교민의 출현빈도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에서 40%

5) 분석에 앞서 먼저 대통령 간 검색어 출현빈도의 비교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발전된 교통 및 통신기술, 한국의 경제력 향상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외국방문과 재외한인들의 한국 방문의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에서 재외한인의 재현빈도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각 대통령별 검색어의 출현비율이다.

이상을 차지하던 “교포”라는 명칭이 전두환 대통령 기록물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점은 김대중 대통령 기록물에서 “교민”의 출현빈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대신 “동포”의 출현 비율이 약 70%로 다시 증가한 점이다. 이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물에서 약 23%, 박정희 대통령 기록에서 11% 정도의 빈도로 출현한 “한인”이라는 명칭이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김영삼(13%)·김대중(15%) 대통령 관련 기록물에서 다시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동포”라는 명칭은 대통령들의 해외방문 관련 기록물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박정희(10건), 전두환(38건), 노태우(47건), 김영삼(31건), 김대중(97건) 대통령이 “동포”들이나 방문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동포”라는 명칭으로 재외한인을 명명한 기록이 검색되었다. 이와 함께 “동포”는 대통령의 의례적 메시지-취임사, 신년사, 시정·국정연설, 국경일 기념사, 전국체육대회축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17건이 동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박정희(55건), 전두환(36건), 노태우(21건), 김영삼(23건), 김대중(13건) 대통령이 “동포”를 언급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동포”라는 명칭의 용례이다. 위 표에서 “동포”란의 ()안에 들어 있는 숫자는 각 대통령들의 기록물에서 재/해외 동포 외에 “국내동포”, “북한동포”라는 명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⁶⁾ 예를 들면, 역대 대통령들의 의례적 메시지의 수신자들로서의 “동포”는 “국내외 동포”나 “국내/일반동포, 북한동포, 해/재외동포”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동포는 “국내외 동포”와 “북한동포” 또

6) 자료검색을 할 때 재외나 해외라는 접두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검색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하면 “재일교포”나 “재미동포”의 경우처럼 각 국가별 재외한인을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동포”를 검색하면 “국내동포”나 “북한동포”라는 명칭을 포함한 기록물이 모두 검색되어서 애초에는 그 자료들을 제외하고 분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재외 동포라는 명칭의 의미가 “동포”라는 용어가 사용된 전체 맥락 속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또 한인이라는 검색어가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물에서 한국인이라는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된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용법도 현재의 재외한인이라는 단어의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동포나 한인이 이런 의미로 사용된 기록물은, 비록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지만, 모두 확인하였고 재외한인의 명칭과 범주를 논의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는 “일반동포”, “해외동포”와 “북한동포”라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경우가 흔했고 전두환 대통령의 1986년 신년사는 국민, 그리고 북녘 땅과 해외의 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1980년대 중반 전두환 대통령 이후 시대의 차이는 “국내/일반동포”가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동포”와 함께 “한인”이라는 명칭도 “재/해외한인”이라는 의미와 함께, 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에서, 전체 “한국인”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한인”은 긍정적이거나 또는 동정적인 이미지의 “동포”와 달리 “한인 공산당”,⁷⁾ “한인 악질분자”⁸⁾와 같이 부정적인 맥락에서도 사용되었고 특히 “일인”과 대비되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왜정시대(倭政時代)에 일인(日人)들이 학교를 각처에 설치했든 것이나 저의 소수 일인아해(日人兒孩)들만의 교육을 한 것이고, 우리 한인아해(韓人兒孩)를 위한 것은 몇 개 없었던 것인데”⁹⁾라고 하였다.

또 두 번째로 많이 출현한 “교포”라는 명칭은 박정희 대통령 기록물에서 절반 이상(57%)이 사용되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79건(49%)의 기록이 “재일교포”에 대한 것이었다. 기록물의 내용은 60년대 한일회담에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 재일교포의 복송문제와 관련된 보고 및 지시사항이 많았고 70년대는 재일교포 실업인들의 한국 내 재산반입과 사업 그리고 재일교포교육과 관련된 기록이 많았다. 이전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 기록물에 나타난 “교포” 관련 자료 역시 대부분 재일교포에 대한 기록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물 16건 중 14건이 재일교포 관련 기록물이었다. 재일교포를 접견한 기록과 재일교포복송과 관련된 자료들이 각각

7) “공산당과 협의 불가, 인권보중에 결사투쟁”, 대통령 연설문, 1949. 10. 7. 이하에서 인용되는 대통령기록관 자료들의 출처는 모두 이와 같이 ‘기록물 제목, 생산자 또는 기록물 성격, 생산년월일’의 형태로 표기한다. 종이문서는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록콘텐츠는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록물의 성격을 밝히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 자료들은 모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기록검색(<http://www.pa.go.kr/portal/search/base/searchList.do>)에서 검색란에 “기록물 제목”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8) “한인 악질분자송환 및 기타에 관한 건”, 대통령 비서실, 1950. 2. 1.

9) “학부형에게 과중 부담은 불가”, 대통령 연설문, 1953. 5. 22.

4건이었다. 또 윤보선 대통령의 교포 관련자료 중 11건이 재일교포접견에 관한 기록이었고 당시 윤대통령이 접견한 “재일교포”들은 전국체전에 참여하기 위해 온 청소년 운동선수나 경제인들이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기 이후부터 이 “교포”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록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교민”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기록물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관련 기록물에서부터 “교민”의 사용도 다시 감소하였다. 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동포라는 의미의 교포(僑胞)에 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교민(僑民)이라는 범주가 전두환 대통령 시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관련 기록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우선 80년대 이후 대통령들의 순방외교를 포함해 한국민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대통령 기록물에서 “교민”이 포함된 51건 중 44건이, 노태우 대통령의 79건 중 71건, 김영삼 대통령의 81건 중 58건이 외국방문 시 “교민 리셉션”에서 현지 “교민”을 언급한 자료들이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순방관련 기록물에서 “동포”가 언급된 자료가 10건, “교포”가 13건이었던 데 비해 “교민”이 언급된 자료는 2건에 그치고 있는 것과 명백하게 대비된다.

끝으로 김대중 대통령 관련 기록물에서 “교민”, “교포”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동포”, “한인”의 사용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외순방 관련 기록에서 “동포”가 많이 등장한 것 외에도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하 ‘평통’)”에서 생산한 재외한인 관련 자료(64건)와 “재외동포법” 관련 자료(11건)에서 “동포”라는 명칭이 많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또 김영삼 대통령 기록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한인”의 사용도 김대중 대통령 기록물에서 더 빈번해졌다. “한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물부터 주로 “한인사회”¹⁰⁾나 한인회, 한인교회 등의 단체¹¹⁾ 및 직업¹²⁾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김

10) 예를 들면, “태국 교민 초청 리셉션 격려사”(대통령 연설문, 1981. 7. 5.), “미국 대규모 소요사태 관련, LA지역 교민에 보내는 위안전문”(대통령 연설문, 1992. 5. 2.),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연설”(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실, 1995. 10. 2.) 등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은 “한인사회”를 언급하였다.

11) 그 밖에 한인학교(“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 토요일인학교교사 학생 접견 선물전달”, 대통령 사진·동영상, 1996), 한인가무단(“소련 한인가무단 공연

대중 대통령의 기록물에서도 가장 많은 36건이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물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입양한인(또는 한인입양인)”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¹³⁾ 총 13건의 입양한인 관련 기록물들은 주로 입양인 대회 격려 메시지나 모국방문 입양인들 접견에 관한 것들이었다.

2. 동포, 교포, 교민에서 다시 동포로

대통령 기록물에서 재외한인의 명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는 재외한인의 범주에 대한 대통령과 역대 정부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외한인들은 처음 주로 동포와 한인으로 호명되다가 이어 교포와 동포, 교민과 동포라는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동포로 일원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¹⁴⁾

그런데 여기서 “동포”라는 명칭의 용례는 한국 민족의 범주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국내 동포, 재(해)외 동포, 그리고 북한 동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용어는 한국 민족국가의 구성원의 최대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동포”는 조선이라는 봉건국가가 무너지고 왕정의 신민(臣民)에서 벗어나 근대적 민족으로 재구성되던 시점부터 한반도에 존재한 것으로 상상되는 민족공동체의 원형을 나타내는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 “동포” 집단이 ‘험난한 민족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멕시코 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특히

관람”(대통령 일정, 1989. 9. 29.), 한인신용협동조합(“재외한인신용협동조합대표자 다과”(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실, 1995. 6. 8.) 등의 사례가 있다.

12) 한인의사(“재미한인의사초청 학술대회 개최경비”, 대통령 비서실, 1977. 6. 22.), 한인상공인(“세계 한인상공인 대회 참가자 격려다과”, 대통령 비서실, 1994. 9. 17.), 재외한인음악가(“재외한인음악가접견(영부인)”,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실, 1994. 9. 2.), 한인과학자(“재미한인과학자 초청 강연회 참석 요청”,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9) 등이 있다.

13) 예를 들면, “미국 한인입양인 연합회 대회 격려 영상메시지”(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실, 1999. 7. 16.), “이회호 여사, 덴마크 입양 한인 접견”(대통령 비서실, 2002. 9. 22.) 등이 있다.

14)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관련 기록물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일본 식민지 시기 제국의 영역으로 흡수되게 되면서 해외동포라는 집단으로 분화되었으며 또 해방 이후 분단을 거치면서 북한 동포라는 집단으로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외한인을 해/재외동포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들이 민족사의 진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포”라는 명칭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재외한인들이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살 사람들로 한국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기록물에서 재외한인들은 의례적 메시지에서는 “동포”로, 당시 본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재일한인들과 관련된 실질적 문제들-북송, 한일회담, 재산반입 등-에 대한 기록물에서는 주로 “교포”로 호칭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이들을 “교포”, 즉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것이 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북송’과 관련된 자료에서 “동포”로 호명된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1건이 검색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한 건도 없었지만 “교포”로 명명된 경우는 각각 5건, 6건이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물에서 한일협정, 재일한인의 재산반입과 관련된 기록물 중 “동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역시 한 것도 없었다. 자의든 타의든 북송되는 사람들이나 본국민들의 재산과는 다른 범주의 “해외재산”을 반입하는 사람들은 “동포”가 아니라 외국에서 정착하고 살던,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교포”여야 하며 일본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투표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¹⁵⁾ 역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하지만 돌아올 “동포”들이 아니라 일본에서 정착해야 할 “교포”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교포라는 명칭의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 “교민”의 출현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70년대 중후

15) “한일회담”(대통령 비서실, 1964. 2. 10.)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는 “교포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어 제한 없는 참정권이 확보되면 한국도 일본에 식민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임”이라는 논평이 부기되어 있고 한일회담 타결 후 작성된 “영주권 신청 촉진 종합계획”(대통령 비서실, 1969. 5. 10.)이라는 문서는 영주권 취득의 이득을 알리는 “편람”을 발간, 재일교포들에게 배포하고 또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계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부터 본격화된 한국민들의 해외진출과 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정상외교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외한인에 대한 인식에 또 한 번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63년부터 시작된 월남전 참전과 간호사·광부의 파독, 65년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 그리고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동건설 특수 등으로 한국민들의 해외진출이 누적되면서 재외한인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유학, 해외근무자 등 정착 이민자들 외에 장단기 체류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체류국도 다양해졌다. 이와 함께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대미 의존적 외교정책에서-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배경으로-일정 정도 벗어나 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상외교는 “결과적으로 한국 외교 노선을 다변화”시켰다.¹⁶⁾

교포와 재외국민을 합한 교민이라는 명칭이 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90년대 중반까지 많이 사용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외교관계의 다변화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국에 살고 있는 자국 출신 이민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민자들을 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국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두환 대통령 기록물부터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수많은 교민리셉션 기록은 한국 정부가 재외한인들을 ‘한국인’으로 동원하는 주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진출하여... 조국의 번영과 빛나는 미래를 위해 매진”¹⁷⁾하는 교민들을 격려하고 해당국의 정치지도자나 지역의 관리들과의 만남에서 빠지지 않고 “한국 교민”들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¹⁸⁾ 한국 교민들은 두 나라의 “가교역할”¹⁹⁾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한국인상을”²⁰⁾ 심어 줄 것을 부탁한다.

16) 국가기록원, “외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Content.do?subjectFieldId=000008>. (2015년 8월 9일 검색)

17) “가봉거주 교민을 위한 리셉션 격려사”, 대통령 연설문, 1982. 8. 22.

18) “랩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총독 내외 주최 만찬 답사”, 대통령 연설문, 1991. 7. 5.

19) “밴쿠버 교민 초청 오찬 연설”, 대통령 연설문, 1991. 7. 5.

20) “브루나이교민 초청리셉션 연설”, 대통령 연설문, 1988. 11. 13.

이렇게 재외한인에 대한 명칭이 “교포”에서 “교민”으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재외한인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전두환 정부의 “정상외교”,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를 거쳐 “세계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 점차 구체화되어 갔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 “헌법(2조 2항)에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조항이 삽입되어 재외국민정책이 제도화, 법제화”되었고 노태우 정부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논의되면서 재외한인들이 “한민족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포함되었다(이진영 2010, 7). 김영삼 정부는 “교포의 세계 시민화”와 “교포의 본국과 거주국 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교량적 역할 지원”을 목표로 한 “신교포정책”을 수립하고 재외한인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는데(이철우 2005, 515-516), 이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의 설립으로 이어졌다.²¹⁾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김영삼 대통령의 “교민”에 대한 인식 역시 이들이 일차적으로 거주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즉, 이들의 메시지에서 교민들은 “그 사회의 성실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해당국에서 “동화”와 “적응”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²²⁾ 따라서 “교민”들은 거주국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거주국에서 “훌륭한 한국인상”을 심어주고 한국이 필요할 때 거주국과 한국 사이의 “가교”가 됨으로써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지만, 결코 본국의 구성원들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본국 사회에 참여하는 주체는 아

21) 재외동포재단은 김영삼 정부 출범부터 시작한 재외한인 지원정책의 결과물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으로 “비서실 내에 교민담당비서관직”(이진영 2010, 8)을 설치하였다(“인사: 대통령비서실 교민담당비서관 전봉근”, 대통령 비서실 공보 수석실, 1993. 5. 13. 참조). 또 93년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도 “LA에서 해외 교민들의 법적, 제도적 지위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교민들 기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 보호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창간 48주년 특별회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무대”, 대통령 연설문, 1993. 11. 23.).

22)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미국방문 뒤 행한 한 TV 인터뷰에서 방미 시 교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미국화가 되어 달라는 것이지요. 백인이든 소수민족이든 역시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뿔뿔 뿔뿔 뿔뿔 한국 사람하고만 지냈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살면서 미국에 이민을 간 이상은 미국에 사는 훌륭한 시민이 되어 달라는 얘기입니다.”(“MBC 창사 32주년 특별회견: 세계는 개혁 경쟁 시대”, 대통령 연설문, 1993. 12. 2.)

닌 것이다.

이런 인식은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뒤이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극적으로 변화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해외동포”와의 유대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지를 표명하였는데²³⁾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재외한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었다.²⁴⁾ 특히 김대중 정부의 재외한인정책은 재외한인과 본국과의 유대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국 우위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00년 행한 재외공관장 만찬 연설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의 큰 자산”이므로 “이들이 거주국 국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본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동포 2세들이 민족의 문화, 역사,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⁵⁾

23) “새 정부는 해외동포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한국계로서 안정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24) 재외한인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처음 언급된 것은 6대(1967)부터였다. 그때부터 취임사에서 “국내외동포”라는 호칭으로 재외한인이 포함되었으나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취임사의 내용 속에 재외한인이 등장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에 와서부터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재외한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그 내용은 통일을 위해 재외한인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그치고 있다(“세계 도처에서 민족의 긍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5백만 해외 동포 여러분, 금세기 안에 조국은 통일되어, 자유와 평화의 고향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내외에서 힘을 합하여 세계 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런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25) “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 재외공관장 만찬 연설”, 대통령 연설문, 2000. 2. 8. 대통령들이 재외공관장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문에서 본 연구의 검색어가 포함된 기록물은 모두 8건이 검색되었는데, 이들 기록물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명칭과 인식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교포들에 대하여 관료주의자 고자세로써 불친절하게” 대하지 말 것과 “교포와 일심동체가 되어 그들이 한국 해외 발전의 첨병으로서 유감없도록 유대”를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해외공관장에게 보내는 친서”, 대통령 비서실, 1967. 12. 15.; 1968. 12. 15.), 전두환 대통령은 “공관장의 부인”들이 “교민들을 선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재외공관장들을 위한 만찬 격려말씀”, 대통령 연설문, 1983. 1. 13.; 1983. 2. 17.). 노태우 대통령은 연설의 마지막에 “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는 부탁에서 재외한인을 언급하고 있다(“재외공관장을 위한 만찬 연설”, 대통령 연설문, 1991. 4. 22.). 김영삼 대통령도 1993년 연설에서는 “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는 언급만이 있었지만, 1996년 연설에서는 주재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민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데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재외한인에 대한 명칭은 “(재외)동포”로 정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김대중 대통령 기록물에서 “동포”가 사용된 맥락과 용례를 검토하면 “동포”에 드러난 정부의 이런 인식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해외순방기록에서 “동포”라는 명칭으로 검색된 97건의 기록에는 81건의 “동포간담회/리셉션”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리셉션 기록은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간담회 기록이다. 이는 이전까지 교포, 교민, 동포 명칭을 모두 합해서 리셉션이 아니라 “간담회”로 명명된 행사는 노태우 대통령 관련 기록 1건뿐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점이다.²⁶⁾ 흔히 방문국 주재 대사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환영행사인 (교민) 리셉션에 비해 간담회는 참석자들 간의 대화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동포”라는 명칭에 드러난 재외한인과의 유대강화 의지를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동포”라는 검색어로 검색된 김대중 대통령 기록물에서는 또 “평통” 관련 기록물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수와 성격에서 이전 대통령 기록물들과 상당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기록물에서 “평통” 관련 기록이 주로 “교포/교민”이라는 검색어로 각각 7건, 6건이 검색되었으며 모두 자문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물에서도 주로 “교민”이라는 검색어로 총 29건이 검색되었는데, 여기에는 연설문(16건) 외에도 “평통”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중국 및 사회주의권 동포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8건)이나 “평통” 주최의 통일문제 “교민간담회”(16건) 등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통” 관련 자료 69건은 모두 “동포”로 검색되었는데 그중 연설문이 4건을 제외하고 27건이 “동포 대학생 통일연수”나 “통일문제 동포간담회” 등 재외한인에 대한 통일교육에 대한 기록물이었으며 18건이 “재한 중국 동포 유학생 초청 간담회” 관련 문서였다.

그런데 이 기록물들은 역대 정부가 통일과 관련하여 재외한인들에게 기대한 역할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전두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재외 공관장을 위한 만찬 연설”, 대통령 연설문, 1993. 4. 13.; “재외공관장 만찬 격려말씀”, 대통령 연설문, 1996. 2. 27.).
26) “멕시코방문: 공식환영행사, 정상회담, 만찬참석, 영부인동정, 교민과의 간담회”, 대통령 연설동영상, 1991. 9. 25.

노태우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공통적으로 평통 해외지역자문위원들에게 “북한의 교포/교민사회 와해/분열” 기도에 맞서 “교포/교민 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힘써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국내외 동포의 단합”이 필요함으로 역설한다. 90년대 초까지 평통 해외지역 회의의 역할은 이처럼 교포/교민들과 “조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 이들이 북한과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 접어들면서 “평통”은 해외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교민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및 사회주의권 동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재외한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²⁷⁾ 이 움직임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²⁸⁾ 예를 들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기여방안”, “재외동포 1.5-2세를 위한 올바른 민족관과 통일관 정립방안” 등이 수립되었다. 재외한인들과 북한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데서 벗어나 재외한인들을 통일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사실 재외한인을 “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정부가 재일교포들의 영주권 취득을 한국이 일본에 “식민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나 1980년대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국의 외교관계가 다변화되면서 교민의 가치를 재인식한 것 등도 모두 재외한인을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인식은 재외한인을 “동포”로 규정한 데서 이전 정부와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 및 북한거주민, 재외한인을 모두 포함하는 “동포”라는 개념에서 나온 “재외동포”라는 명칭은 재외한인을 다른 거주국에 살고 있는 개별적인 “교포/교민”이 아니라 남한, 북한과 같은 단위의 동일한 집단, 즉 “이산공동체(diaspora)”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외동포는 한국과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물에서는 여전히 북한과의 분열기도에 대비한 교민사회의 단합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북한의 교포사회 분열 확장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조국애와 통일 의지를 고취하는 일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민주평통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 오찬말씀”, 대통령 연설문, 1996. 12. 18.)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기 제2차 해외지역회의 개최사”, 대통령 연설문, 1998. 7. 26.

각각의 거주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교민”이 아니라 “모국과 동등한 호혜적인 네트워크의 대상”(이진영 2010, 9)이 되며 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확장하는 “식민자(colonizer)”²⁹⁾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확대를 통해 구축되는 탈영토적 민족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에서 재외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정치적 망명과 재외한인들의 민주화 운동으로부터의 영향 등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더 긴 정치적 망명 경험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재외한인들의 국내 정치 참여를 막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 경험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오히려, 냉전체제의 붕괴와 한국 외교관계의 다변화로 재외한인의 역할이 재발견된 것 같이, “재외동포”라는 명칭의 전면적인 사용 역시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요인과 그 질서에 한국 사회가 편입한 계기가 된 97년 외환 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자본의 강화된 초국적 활동에 대한 민족국가의 대응방식의 하나로 국경을 넘는 사회적 관계의 구축을 통해 민족 구성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 속에서 재외한인과 그 후손들이 “이산공동체”, 즉 “재외동포”로 재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재외한인의 명칭의 변화는 재외한인에 대한 한국 민족국가의 인식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인”이라는 명칭의 사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기록물에서 “한인”은 주로 조직화된 재외한인들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런 “한인”의 용례는 역대 정부의 조직화된 재외한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물에서 “한인”으로 검색된 44건 중 24건이 1975년도에 미주지역 한인교회 목사들이나 세계 각 지역 한인회장에게 보낸 서한이었는데 이는 같은 해 공포된 유신헌법을 홍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29) 박정희 대통령의 재외한인을 통한 국가의 영토 확장 인식은 1960년대 추진된 남미이민관련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동진 브라질 대사로부터 남미지방과 브라질로의 이민문제에 관해 보고를 들은 뒤 ‘남미대륙에 새로운 한국의 씨를 심는다는 각오를 가진 농업기술자를 더 많이 이민시키도록 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농업이민 확대 지시”, 대통령 일정, 1965. 11. 27.)했다.

러나 이런 특정한 목적이 없는 한 노태우 대통령 시기까지 대통령들은 연설 문에서 “한인사회”나 “한인회”를 언급하는 외에 조직화된 재외한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이 명칭과 함께 다양한 한인단체 및 집단이 등장하며 이들이 대통령과 만난 기록이 나타난다. 이는 무엇보다 해외이주의 증가와 재외한인들의 조직화 정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자유화 직후인 9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으로 향하는 중산층들의 ‘신이민’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이민 붐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여러 도시에 새로운 한인이민사회가 형성되고 한인회가 조직되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한인회는 80년대 말까지 회원 수가 수 십명에 불과한 말 그대로 친목단체였으나 이주가 늘어난 90년대 중반 이후 7개의 도시에 한인회가 조직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 미국 등 이주의 역사가 오래 되고 한인의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인회 뿐 만 아니라 “미주한인태권도지도자협의회”나 “미주한인장애인연합회” 등과 같이 직능별로 다양한 단체가 조직되었다.

9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이렇게 조직화된 재외한인들을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한인회장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이들을 한인이산공동체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 처음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나타난 “입양한인”이라는 명칭은 획기적이다. 입양인들은 한국에서 출생하였지만 영유아기 때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고 성장하여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므로 이들과 한국 민족국가와의 관련성은 이들이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것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인식이 강하고 한국 민족국가의 입장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들을 “입양한인”이라는 명칭 하에 한인이산공동체의 새로운 일원으로 포섭한 것이다.

IV. 재외한인들의 본국 사회 참여 과정

한국 정부가 재외한인에 대한 재발견과 포섭을 통해 탈영토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러나 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된 것도 아니었고 재외한인들 역시 본국의 인식과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의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 시도는 본국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민국과 본국 모두에서 성원권을 획득하려는 재외한인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이민자들이 이주 후에도 본국 사회에 참여를 지속하는 현상에 대한 주목은 최근의 일이지만 그 현상 자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이민자들과 본국의 초국적 관계가 흔히 이야기되듯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조선)의 이민자들은 식민지배세력에 대한 대항과 민족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이민이 시작된 1903년 이후 미주지역의 한인 이민자 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항한 독립운동의 지원기지였다(이현주 2003 참조). 또한 많은 독립운동세력들이 망명 집단으로 중국대륙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일본의 조선유학생들은 본국의 독립을 목표로 한 학생운동을 펼쳤는데 이들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 이주해 있던 조선인 이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 해외독립운동세력들은 해방 후 국내에 있던 정치세력들과 함께 민족국가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였고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배출되었으며(유영익 2000; 2009 참조) 이들과 함께 한반도에 민족국가, 서구적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유입되고 실천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재외한인들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미국, 일본 등지에서 본국으로 송금을 했다(이민영 1998; 정은지 2003). 특히 1900년대 초부터 45년까지 한인들은 동아시아에 형성된 일본의 식민지영역 내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이유나 독립운동을 이유로 한반도를 떠나 만주로 이주해 갔으며, 이후로도 식민지 경제의 피폐화로 인해 온 가족, 혹은 온 마을 전체가 고향을 떠나 먹고 살 방법을 찾아 제국의 중심인 내지 일본으로, 혹은

제국의 변방인 만주로 떠나갔...고 제국의 주도하에 진행된 만주국 개발과 전쟁을 위해 동원되어 동아시아 각지로 이주해간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다”(윤영도 2011, 190). 그러나 45년 일본제국의 패망과 함께 동아시아 전역과 멀리는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이 이주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었고 이어진 한국전쟁과 냉전은 일부 지역 한인들이 본국과 연결을 지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많은 재외한인들은 한국과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65년 이후 미국으로의 대량이민이 이루어지면서 미주한인들도 이런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송금이나 통신수단을 통한 연결 등에 머물러 있었던 이런 초국적 관계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태를 띠게 된다.

재외한인들은 이처럼 한국 민족국가의 설립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왔고 한국 정부 역시 재외한인들의 본국 사회 참여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간 결과 90년대 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나 최근 제한적 복수국적의 허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결국 이는 재외한인들의 초국적 실천과 한국의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노력이 결합한 결과인데 그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의 일단이 대통령 기록물에 잘 드러나 있다.

1. 재외한인들의 국내 정치 참여 사례

먼저 재외한인들이 이승만 대통령 시기부터 국내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이 있다. 자유당을 창당한 직후인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사조직 나성동지회³⁰⁾에 자유당 입당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낸다.³¹⁾ 또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제

30) 라성동지회는 이승만이 1921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조직한 동지회(同志會)의 로스앤젤레스지회로 1929년 10월에 이승만의 로스앤젤레스 방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홍선표, “북미시보해제”, <https://search.i815.or.kr/OrgData/html/NewsHeje/BK.html>. (2015년 8월 14일 검색)

31) “...이거슬그져두르고는압호로민국을보훈하기어려울거심으로 지금은서로정당으로 조직하여자유당이라는명의로대활동이되고있스니귀회 여러동지들은 이취지서를 자세히보시고 이정강으로밋는 남녀동포는 일일히선서입당하여 동지회는 여전히직혁

3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선거 참여를 “친일하는 사람”을 통해 일본이 “정권을 도모”하거나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인 “공산당원”이 잠입할 위험을 들어 만류하고 있다.³²⁾ 5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이 재정을 모아서 리대통령 선거운동에 선전문을 박아서 분전할 운동을 행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있어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금지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³³⁾

재일한인들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69년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하자 재일거류민단의 전 단장인 “정찬진 등 9명은 1969년 9월 1일 ‘3선 개헌 반대 재일 한국인 투쟁위원회’를 결성, 9월 9일 (1)본국 정부의 “장식 건설”을 막고, (2)민주주의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3선 개헌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³⁴⁾ 또 “9월 15일 소위 ‘3선 개헌 반대 재일 한국학생 전국협의회’ 소속 재일 교포 약 45명이 주일한국대사관 건물에 진입하는 등 3선 개헌 반대 소요를 일으키다가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하여 진압되고, 경찰에 압송”되기도 하였다. 재일한인들의 국내 정치 참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재일교포들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우선 김대중과 관련된 한민통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었으며, 재일교포들은 일본 사회당과 함께 김대중 납치사건,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 사건, 그리고... 광주항쟁 등에 지지를 보냈다.”³⁵⁾

가며 자유당당원이만해서 민족분렬을일삼는무리들은종종상쟁의화근을 양성치못할 만치 만들어야될줄로밧는바입니다.”(“라성동지회 일동”, 대통령 연설문, 1952. 1. 1.) 실제로 동지회를 관리하면서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 재정적 도움을 주었던 이원순은 그 후 대한상공회의소 주미대표로 임명되었다. 그 밖에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가 미국, 유럽을 대상으로 한 외교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한 구미외교위원부의 대표로 활동하였는데, 1925년 임시정부가 이를 폐지한 이후에도 계속 그 직함으로 대미외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때 구미위원부에서 같이 활동하던 정한경, 임병직 등도 정부 수립 후 각각 주일대표부 초대공사,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정휴 1991, 67-69).

32) “재일교포의 입후보에 대하여”, 대통령 연설문, 1954. 4. 28.

33) “해외로부터의 선거자금 유입을 금하라”, 대통령 연설문, 1956. 4. 10.

34) “재일교포 중 일부 개헌 반대 성명 발표”, 대통령 비서실, 1969. 9. 19.

35) 박태균, “박정희 대통령 시기 한일관계 문서 해제”, <http://dams.pa.go.kr:8888/dams/ezpdf/ezPdfFileDownload.jsp?itemID=%2FDOCUMENT%2F2013%2F12%2F18%2FDOC%2FSRC%2F0104201312189126900091269013436.PDF>. (2015년 8월 14일 검색)

재미한인들의 민주화운동을 짐작케 해주는 기록물도 찾아볼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81년 2월 미국 방문 시 “60만 교포들이 뜨거운 환영을 보내고 있으나 몇몇 분이 아직도 환경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³⁶⁾는 것을 밝혔고 미국 공식 방문 후 수행기자단과의 기내 회견에서는 “일부 국내문제와 과거 감정 때문에 몇몇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 숫자가 지극히 적었다. 그들에게도 모국방문을 허용하는 등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관용을 베풀겠다”고 말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93년 “APEC 지도자 회의 및 미국 공식방문”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³⁷⁾에서 재미한인들이 “과거에는 미국에 살면서도 마음은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이” 있어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재미한인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참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재외한인들의 국내 경제 참여와 초국적 관계의 제도화

재외한인들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본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하여 하와이로 이민자들이 처음 떠난 인천에 인하대학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하와이 한인들의 모금이 대학설립의 종자돈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³⁸⁾ 또 이 대통령이 “상공장려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일교포 생산품 본국 전시회”를 관람했다는 기록³⁹⁾은 윤보선 대통령이 모국을 방문한 “제일교포 경제인연합회 및 상공인 연합회 60명”을 접견하고 이들에게 “산업재건과 경제부흥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는 기록⁴⁰⁾이나 “일본 오사카에서 교포

36) “워싱턴동포 초청 리셉션 연설”, 대통령 연설문, 1982. 2. 1.

37) “MBC 창사 32주년 특별회견: 세계는 개혁 경쟁 시대”, 대통령 연설문, 1993. 12. 2.

38) “제일 근본으로 토태 삼는 것은 하와이에서 15만 불을 모아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시작할 것인데, 이 돈은 하와이 농민들이 한인(韓人) 청년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서 지낸지 30년가량 된 것인데, 우리 청년들은 상당한 미국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 기지를 팔아서 거기서 난 재정이 이것으로 시작을 말연한 것이니”(“인하대학(仁荷大學) 설립에 관하여”, 대통령 연설문, 1953. 6. 4.)

39) “제일교포 생산품 전시회 참관”, 대통령 일정, 1958. 12. 3.

40) “제일교포실업인단 모국 방문 일정 및 윤보선 대통령 접견”, 대통령 사진·동영상, 1961. 12. 20.

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금강학원의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교포교육에 힘쓰는 서갑호 씨에게 공익포장”을 수여했다는 기록⁴¹⁾과 함께 일본 내 한인 경제인들과 한국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들어오면서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급증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을 계기로 일본 내 친한 정치세력을 양성하려는 시도로, 경제건설을 위한 자본유입의 한 방안으로, 또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일본 내 한국 정부의 지원세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일한인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박 대통령은 재일한인들의 한국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반입을 허용하는 등 이들의 국내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수립, 시행하였고 그 결과 재일한인들의 국내 활동도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0년대 중반부터 재일한인의 투자를 유도하고 한국 방문을 용이하게 하며 재산반입을 허용하는 것에 관한 기록물이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는 구로동 공업단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계관회의를 소집, 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을 위해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에 있어 한도액 5천만 원 이상을 5만 불 선으로 하고 법인, 지방세의 면제조치를 결정하였다.⁴²⁾ 그리고 그 삼 년 뒤 있었던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준공식 치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실업인, 특히...재일교포실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조국의 산업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러한 열의에 의해서 훌륭한 공장이 건설”된 것을 치하하였다.⁴³⁾ 또 정부의 경제각료와 재일교포 실업인을 만나게 하여 “한일 민간 무역 증진책과 재일교포재산반입문제 등을 논의”⁴⁴⁾하게 하였으며 재일교포의 본국 송금,⁴⁵⁾ 재일동포를 통한 장비의 국내도입⁴⁶⁾ 등을 검토한 기록들도 보인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 시기 있었던 재일한인의 한국 사회와 경제에 대한

41) “재일교포 서갑호 훈장 수여”, 대통령 일정, 1961. 2. 25.

42) “수출공업단지 개발 관계회의”, 대통령 일정, 1964. 3. 12.

43)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준공식 치사”, 대통령 연설문, 1967. 4. 7.

44) “재일교포 실업인들과 오찬”, 대통령 일정, 1964. 7. 11.

45) “재일교포의 본국가족에 대한 송금자유화”, 대통령 비서실, 1966. 1. 26.

46) “재일교포의 중장비 도입에 관한 검토”, 대통령 비서실, 1968. 6. 7.

참여는 정부의 일방적인 허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되어 있던 재일한인들의 초국적 실천을 수용하거나 재일한인들과 한국 정부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한 “재일거류민단부장은 한일회담대표단에 재일교포 1명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재일교포의 문제를 안보적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고⁴⁷⁾ 그 2년 뒤에는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됨을 계기로” 복잡한 관련법을 개정해 재일교포들의 “재산반입의 길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다.⁴⁸⁾ 그리고 같은 해 교포들의 재산도입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⁴⁹⁾가 내려진다. 또한 재일교포의 재산반입현황⁵⁰⁾이라는 기록물에서는 재일한인의 국내 재산 반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기 전에 재무부가 제주도 개발을 위해 해외동포재산 반입방침을 변경하고 특례 허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는 많은 재일한인들의 출신지인 제주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재산반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지원에 맞선 한국 정부의 재일거류민단계열 재일한인에 대한 지원을 60-70년대 남북한 간 체제경쟁의 대리전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협회”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용자 결정과정을 보여주는 두 기록물⁵¹⁾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일차적으로 재일한인의 요청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며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지원은 용자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여러 가지 논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먼저 첫 번째 문서는 “재일 한국인 신용조합 협회”

47) “재일거류민단대표단 접견”, 대통령 일정, 1964. 4. 1.

48)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됨을 계기로 하여 재일한국인 중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자들 간에는 근자에 와서 조국에 가서 적당히 알맞은 사업을 경영해 보겠다는 기풍이 양성되고 있으나 현행규정로서는 그 재산 반입의 방도가 전무하므로 이 길을 개척해 달라는 진정이 날로 증대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외자도입법에 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법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관계도 있어 재일교포로서는 용이한 방법을 취해 달라는 것이오니 재산반입의 길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재일거류민단대표의 건의사항”, 대통령 비서실, 1966. 1. 6.)

49) “교포재산도입방안 연구지시”, 대통령 비서실, 1966. 10. 14.

50) “재일교포의 재산반입 현황(제주도)”, 대통령 비서실, 1966. 8. 18.

51)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협회의 특별 용자”, 대통령 비서실, 1965. 4. 24.; “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 1965. 3. 17.

가 “재일교포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 용자”를 요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두 번째 보고서는 지원의 근거로 조련 계가 과거 8년 동안 총액 37억 엔(약 1,000만 불)을 투입하여 교포의 적화 공작을 벌이고 있는 중에 300만 불의 추가 용자는 적화공작 봉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로 제시된 이유였고 보고서가 밝힌 지원의 첫 번째 근거는 일본 정부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재일 교포를 방치할 경우 도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과거 3년간 재일한인의 본국 송금이 300만 불 이상이며 이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법적 지위가 안정되면 송금과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일본과의 대결에서 유일최대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원을 해야 할 이유로 들고 있다.⁵²⁾

60, 70년대에도 이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재일한인들은 활발하게 초국적 실천을 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재일한인들의 모국참여는 기업가들이나 경제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재일한인들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재일교포 올림픽 후원회”를 결성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⁵³⁾ 또 64년 재일교포 학생들이 “하기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에 왔으며,⁵⁴⁾ 곧 이어 재일교포학생들의 방문을 제도화한 규정이 제정되었다.⁵⁵⁾ 이어 재일교포의 본국 입국수속을 간소화하는 것에 관련된 기록이 나타났고,⁵⁶⁾ 또 69년에는 “재일교포의 가족방문 허가 방침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재일교포들의 초국적 실천은 한국의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일상화되었는데⁵⁷⁾ 박정희 대통령은 74년 식목일 기념사에서

52) 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는 이후 재일한인들이 결성한 다른 경제단체(재일 한국인 경제인 연합회, 재일 한국인 상공회 연합회)들과 함께 1977년 “사단법인 재일 한국인 본국 투자협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단체는 현재 신한은행의 모체가 되었다(정동일 2005 참조).

53) “재일교포 올림픽후원회 결성에 즈음한 메시지”, 대통령 연설문, 1964. 5. 28.

54) “재일교포학생 하기교육 받고저 도착”, 대통령 비서실, 1966. 7. 30.

55) “재일교포학생하계교육규정”, 법제처, 1966. 8. 12.

56) “재일교포의 본국 입국수속 간소화”, 대통령 비서실, 1964. 10. 26.

57) “재일교포 청년봉사단원과 식수”, 대통령 일정, 1974. 4. 5.

산림이 잘 보존된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들을 통해 한국의 산림녹화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려 하였다.

재외한인들의 초국적 실천과 한국 민족국가의 이들에 대한 포섭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고 제도화되는데 재외한인들이 전국체육대회나 한민족체전과 같은 연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노력의 일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관심 검색어로 검색된 대통령의 전국체육대회치사에서 재외한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7년도이다. 이후 71년까지 치사에는 “재일교포”에 대한 환영이 나오고 72년과 74년에는 “재미, 재일교포” 선수단, 75년과 77년에는 재미, 재일 교포 및 유럽 지역 교포 선수단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79년부터 “해외동포 선수단”으로 명칭이 바뀐다. 특히 89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한민족체전(이후 한민족축전으로 명칭변경)”은 그동안 “냉전의 높은 벽이 가로막혀 오갈 길이 막혀 있던”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재외한인들이 세계 각 지역 재외한인들과 함께 한 첫 행사였는데⁵⁸⁾ 이 행사를 통해서 비로소 “사회주의 국가 동포”를 포함한 “5백만 해외동포”, 즉 한인이산공동체(Korean diaspora)라는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⁵⁹⁾

한편, “한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이 노태우 정부에서 정책담론으로 채택되고 88년 서울올림픽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전 세계의 재외한인들이 이산공동체로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87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미주 한인회총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한민족대표자회의가 결성되었고⁶⁰⁾ 93년 세계한국상공인 총연합회 설립되었으며 2000년 재외동포재단의 주최로 제1회

58) “이 체전은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되새기며 우리 겨레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세계 80여 개국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조국을 찾아오신 동포 여러분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중국과 소련의 동포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감회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대 냉전의 높은 벽이 가로막혀 오갈 길이 막혀 있던 이 분들을 맞는 우리 국민의 가슴도 뜨거울 것입니다.”(“제2회 세계한민족체전 개막에 부치는 인사말”, 대통령 연설문, 1991. 9. 12.)

59) “1989년 9월 26일 오후 3시 노태우대통령이 수원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회 세계한민족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사회주의국가 동포 등 5백만 해외동포를 환영하며 겨레의 힘을 결집해서 화합의 체전을 만들고 나라번영과 민족통합의 날을 앞당길 것을 강조”(“제70회 전국체전 및 한민족 체육대회 참석 치사”, 대통령 사진·동영상, 1989. 9. 26.)

60) “제3회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 인사말”, 대통령 연설문, 1991. 6. 17.

세계한인회장대회⁶¹⁾가 개최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⁶²⁾ 한상대회⁶³⁾ 등 한인 이산공동체를 세계적인 경제네트워크로 만들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났다.⁶⁴⁾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90년대 이후 형성된 본격적인 한국과 재외한인들의 이런 광범위한 초국적 관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계속된 재외한인들의 본국 사회에의 참여와 초국적 실천이 그 기초가 되었다. 많은 경우, 역대 정부는 그런 초국적 실천을 본국민이나 정권차원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수용하거나 제도화해 왔고 재외한인들의 본국 사회에의 참여와 초국적 실천은 그 수용과 제도화의 범위 내에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앞의 기록물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가 한일 협상타결 이후 적극적으로 재일한인의 자본을 유인하려고 한 시도가 사실은 그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재일한인들의 본국 송금을 제도화한 것이며 이런 제도화를 통해 재일한인들의 본국 참여가 더욱 확대된 것은 이를 잘 예시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재외한인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내용 및 담론분석을 통해 역대 정권의 재외한인에 대한 인식과 재외한인의 본국 사회 참여를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재외한인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은 재외한인 관련 연구와 정책에 혼란을 주는

61) “세계한인회장단 초청 다과회 말씀”, 대통령 연설문, 2001. 7. 10.

62) “한민족 벤처 네트워크 개최식 영상 축하 메시지”, 대통령 연설문, 2000. 12. 5.; “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 개막식 축하 메시지”, 대통령 연설문, 2001. 10. 12.

63) “제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식 영상 축하 메시지”, 대통령 연설문, 2002. 10. 9.

64)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는 1981년도에 처음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 이 단체는 한국무역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은 재미한인무역협회가 추축이었다. 그러나 이 단체가 Korean Network를 출범(1996)시키고 세계한민족경제공동체 지도자 연수회(1999)를 개최하는 등 점차 이산공동체의 경제네트워크로 확대된 것도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혁”, <http://www.okta.net/homepage/contents/introduction/history01.asp>. (2015년 8월 14일 검색)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재외한인에 대한 통일된 용어와 개념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외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재외한인의 경험과 한국 사회와 재외한인의 관계를 담고 있는 역사적 구성물임을 논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외한인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동포나 한인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교포, 교민, 재외국민 등 보다 개별적이고 특정적인 개념으로 범주화되어 갔으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를 거치면서 다시 동포나 한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초기 동포나 한인이라는 범주가 탈식민지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던 반면 최근의 동포, 한인 담론은 20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초국적 이주민들을 ‘민족’으로 포섭하기 위한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 시도로서, 이주민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동원된 상징과 재현의 한 방식이었다.

둘째, 이민자들의 본국 사회의 참여는 흔히 20세기 후반기부터 시작된 현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0세기 초반에도 존재했다. 재외한인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참여해 왔으며 역대 정권 역시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을 선택적으로 포섭해 왔는데 이런 역사적 경험은 이후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탈영토적 민족국가 건설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먼저, 재외한인이라는 집단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재외한인이 누구인가를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같은 ‘민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본 연구는 ‘민족’이 다양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범주의 집단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재외한인 수용과 재외한인의 본국 참여가 상호 구성에 의해 확대되고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결과는 귀환 재외한인들을 포함하여 급증하고 있는 이입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을 한국 사회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범주는 새로운 구성원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체들의 실천이 필요하며 주체들의 실천은 범주 자체의 변화를 더욱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포용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들의 실천-대표적으로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일규 (2001). 『재외동포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촉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과제.
- 고정휴 (1991). “이승만과 구미위원부.” 『역사비평』. 14호, pp. 67-70.
- 곽재석 (2011). 『재외동포의 이주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출보고서.
- 구분규 (2002). “이민을 통한 한국 중산층의 지위재생산 전략: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한국인 이민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제6권, pp. 1-30.
- _____ (2012).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9권. 2호, pp. 5-51.
- 권일남·김태균 (2014).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재외동포재단.
- 김봉섭 (2008). “재외동포 관련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연구사의 전개와 쟁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건국60주년기념 공동학술회의. 속초. 8월.
- 박광성 (2007).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인구이동과 경제생활의 변화.” 『재외한인연구』. 제18권, pp. 131-164.
- _____ (2010).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재외한인연구』. 제21권, pp. 357-374.
- 박 우 (2008). “제한 중국 유학생의 이주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족, 조선족 유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19권, pp. 155-181.
- 박채순 (2004). “한민족 네트워크와 재아르헨티나 동포.” 『재외한인연구』. 제16권, pp. 145-192.
- 유영익 (2000).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건국』. 서울: 연세대 출판부.
- _____ (2009).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 연세대 출판부.
- 윤영도 (2011). “조선족 초국적 역/이주와 포스트국민국가적 규제 국가장치에 관한 연구.” 『중어중문학』. 제50권, pp. 185-216.
- 윤인진 (2003). “중국 조선족의 도시이주, 사회적응, 도시공동체: 청도 사례연구.” 『재외한인연구』. 제13권. 2호, pp. 49-89.
- _____ (2010). “재외한인연구의 발전과 미래 과제: 『재외한인연구』(1990 창간호-2010 제22호)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재외한인연구와 한국학: 연계와 통합의 모색. 서울. 12월.
- _____ (2012). “초국가적 환경에서의 재외동포정책과 한민족공동체 발전 방안.”

-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 방향: 초국가적 환경에서의 재외동포 정책과 민족공동체』.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pp. 1-10.
- 이민영 (1998). “해방 전후 일본 탄광의 정황과 조선인노동자의 고용상태: 평산탄광의 「반도인관계잡서류철 (半島人關係雜書類綴)」 검토.” 『경제사학』. 제25권, pp. 252-236.
- 이숙자 (2009). “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권. 5호, pp. 251-271.
- 이정은 (2012). “‘외국인’과 ‘동포’ 사이의 성원권: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경제와 사회』. 제96권, pp. 402-429.
- 이중훈 (2008). “재외한인정책의 역사와 전개: 해방에서 참여정부까지.”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서울. 8월.
- 이진영 (2010).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er Working Paper*. No. 2010-11.
- 이철우 (2006).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성군관법학』. 제17권 1호, pp. 513-530.
- 이현주 (2003).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의 귀국과 정치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0집, pp. 93-126.
- 임영언 (2006).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연구』. 제17권, pp. 87-120.
- 전득주 (1999).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사회교육학회보』. 제4호, pp. 195-204.
- 전형권 (2008).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분석평가와 개선방안: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4호, pp. 165-197.
- 정동일 (2005). 『대한민국 은행을 바꾼 신한은행 방식』. 김영사.
- 정진성 (2012). “‘재일동포’의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제7권, pp. 258-287.
- 최금혜 (2010). “고학력 조선족 국제결혼 여성들의 한국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22권, pp. 139-273.
- 최무현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3호, pp. 51-77.
- Basch, Linda (2001). “Transnational Social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An Eastern Caribbean Case Studies.” Nancy Foner (ed.). *Islands in the City: West Indian Migration to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17-141.

- Basch, Linda, Nina Glick Schiller & Cristina Szanton Blan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Amsterdam: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 Choi, Yoonsun & You Seung Kim (2010). "Acculturation and the Family: Core vs. Peripheral Changes among Korean Americans." 『재외한인연구』. 제21권, pp. 135-190.
- Chung, Angie Y. (2010). "Bridging the Community Divide in Koreatown Politics." 『재외한인연구』. 제21권, pp. 242-285.
- Harvey, Davi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 Kim, Hyojoung & June H. Sun (2010). "Uhmma Mak Dae Gi: Parenting Styles and Intergenerational Sexual Socialization Among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재외한인연구』. 제21권, pp. 191-241
- Koo, Bongju (2010). "Koreans between Korea and New Zealand: International Migration to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h. D. Thesis, University of Auckland.
- Levitt, Peggy (2001). *The Transnational Villager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vitt, Peggy & Nadya Jaworsky (2007). "Transnational Immigration Studies: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3, pp. 129-156.
- Min, Pyong Gap (2010). "A comparison of Korean immigrant protestant catholic and buddhist institutions in New York." 『재외한인연구』. 제20권, pp. 182-231.
- Yang, Kyejung R. & Kim, Chigon (2010). "Religious Participation and Cultural Practices of Resistance among Korean Immigrant Women Intermarried to U. S. Military Personnel." 『재외한인연구』. 제21권, pp. 287-323.
- 정은지 (2003). "[선우학원 박사에게 듣는 미주 동포운동사 2] 돈 모아 독립운동 자금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다." 『민족 21』. 제33권, pp. 124-129.
- 국가기록원. "외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Content.do?subjectFieldId=000008>. (2015년 8월 9일 검색)
- 박태균. "박정희 대통령 시기 한일관계 문서 해제." <http://dams.pa.go.kr:8888/dams/ezpdf/ezPdfFileDownload.jsp?itemID=%2FDOCUMENT%2F2013%2F12%2>

F18%2FDOC%2FSRC%2F0104201312189126900091269013436.PDF. (2015년 8월 14일 검색)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혁.” <http://www.okta.net/homepage/contents/introduction/history01.asp>. (2015년 8월 14일 검색)

홍선표. “북미시보해제.” <https://search.i815.or.kr/OrgData/html/NewsHeje/BK.html>. (2015년 8월 14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5년 08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8월 27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9월 11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3 (2015)

Representations of Overseas Koreans and Their Home Country Participation Practices in Records from Presidential Archives

Bongiu Koo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This study examines various terms referring to Overseas Koreans and the processes in which overseas Koreans have participat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by analysing related presidential records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It first looks at which terms have been used and how they have been used by the presidents to examine the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 nation state and Overseas Koreans. It then traces how Overseas Koreans have participated in their home coun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 first government in 1948 and how the Korea nation state has dealt with these transnational activitie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 South Korea nation state and Overseas Koreans have constructed each other.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d understanding of changing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amid the influx of international migrants into the country including returning Overseas Koreans.

- Key words: Overseas Koreans, Dongpo, Transnational Migrants, Deterritorialized Nation State, Presidential Archives